

민주 '법사위 양보' 후폭풍...경선주자들도 의견 엇갈려

이재명 "재고 요청" 추미애·김두관 "야당에 넘겨줘선 안돼" 이낙연·박용진 "지도부 결정 존중해야"...정세균 "조건부 존중"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정하는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들도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을 천명하자"고 다른 주자들에게 제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동입장' 제안에는 거리를 뒀다. 추 전 장관 측 관계자는 27일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으면 됐다"고 말했고, 김두관 캠프 관계자도 "법사위 양보는 철회해야 마땅하지만, 공동입장을 내면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 면박을 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다. 또 여야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양보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결과이고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대선주자라고 이를 뒤엎겠다는 건 국회를 자신의 발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의정활동의 무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캠프 관계자도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들 조자 입장이 제각각"이라며 "이 지사는 다른 후보 입장을 묻기 전에 자기 캠프 내부 입장에서 정리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여야 합의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을 들어 '조건부 존중'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상황 노릇을 해온 법사위의 확실한 제도개혁 없이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여진도 계속됐다. 정청래 의

원은 TBS 라디오에서 "법사위를 개혁하니까 쥐도 된다? 그러면 안 쥐도 된다. 법사위가 의미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뺏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법사위에서 체계·지구 심사권을 완전히 들어내지 않는 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라는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넘겨줬는데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그전에 법사위 권한 축소 등을 먼저 하겠다지만 그게 말대로 집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늦지 않게 결정"

후원금 하룻만에 25억 책임감 느껴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 "아직 입당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늦지 않게 행보를 결정해 꼭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여차피 선거는 8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느냐"면서 "진짜 마라톤이니 이를 보는 국민이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결론을 내서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당한다고 해서 외연 확장을 안 하는 게 아니다"면서 "상식의 복원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에 보수, 진보, 중도를 넘어 하나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자신의

캠프에 다수 참여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정치행로를 잡고 가는 것을 국민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영입해 조언을 듣고 캠프를 꾸려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최근 많은 분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재개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 "국민은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주범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드루킹 사건의 광범위한 공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원금 계좌를 연 지 하루 만에 한도액인 25억 원을 다 채운 것에 대해 "상식의 복원, 나라 정상화를 열망하는 분들의 뜨거운 열망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원전 문제에 대해 "원전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국토 불균형발전 해결 책임자"

우원식 선대위원장 등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7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확고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토 불균형 문제"라며 "국토 균형발전 문제는 지도자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해나가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경기도를 놓고 보면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이 지사는 주

민 반발에도 경기 남부에 있던 경기도 공공기관 14개를 북부지역으로 이전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확고한 실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캠프 특보단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 역시 "전남에 와서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야기의 공통점은 국가 불균형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지방소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게 예산이다.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수원에 있는 공공기관 14개를 경기 북부로 이전한 것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지리한 조정식 캠프 총괄본부장은 '적통 문제', '백제 발안' 등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거센 공방과 관련해 "공방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선 과정에서 누가 이기든 민주당 전체가 내년 분선에서 함께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워팀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호남불가론으로 비판받는 이 지사의 '백제 발안'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오해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호남불가론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우 의원 등은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전남을 찾았다. 이들은 "이 지사는 주간에는 도정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대선 전남 민심을 잘 듣고 전달하며 소통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尹캠프, '김건희 동거설' 보도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

"양모 변호사와 아무 관련 없어"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김건희 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 전 유부남인 양모 전 검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매체 보도와 관련, "악의적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출신 기자단에 "김건희 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

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현재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 자신과 양 전 검사 소유였다고 말했으나, 양 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치매 노인을 이용한 "비열한 인권유린"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